

참고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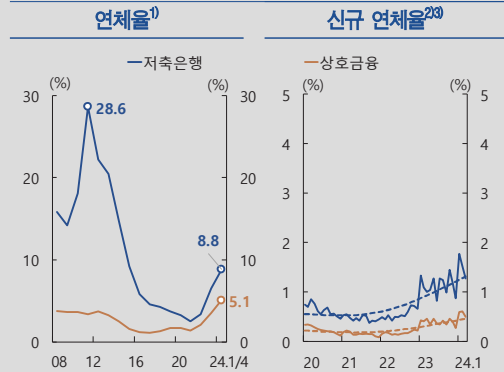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및 시사점¹⁾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되면서 최근 국내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최근 은행이나 여타 비은행업권에 비해 자산건전성 지표들이 빠르게 악화됨에 따라 이들 업권에 대한 경계감이 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산건전성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대응 여력을 점검하는 한편, 부실자산 매각 활성화를 통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산건전성 및 손실흡수력 개선 효과를 추정해 봄으로써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산건전성 현황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업권별 대출 연체율을 살펴 보면, 2024년 1/4분기말 현재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각각 8.8% 및 5.1%로 두 업권 모두 2022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연체율의 경우에도 연체율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저축은행이 상호금융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참고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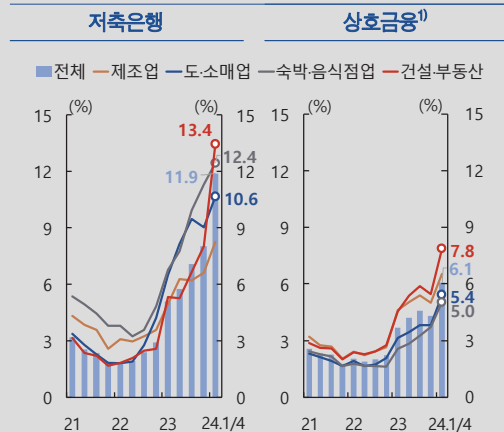
참고 4-1. 업권별 대출 연체율 추이



주: 1) 2023년 이전은 연말 기준
2) 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전월말 대출잔액
3) 점선은 HP필터($\lambda=14,400$)를 통해 추출한 추세선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기업대출 연체율을 업종별로 보면 최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모두에서 모든 업종의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부동산PF 부실 등의 영향으로 건설·부동산업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고금리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도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였다(참고 4-2).

참고 4-2. 업종별 기업대출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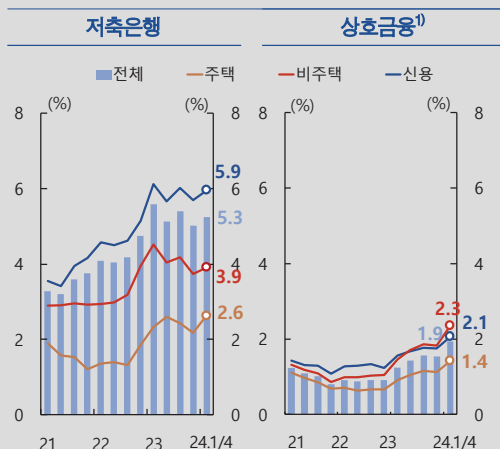


주: 1) 새마을금고 제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 본고는 강정미·송수혁·방누리(중소금융분석팀)가 작성, 신준영(금융기관분석부장), 문용필(중소금융분석팀장)이 검토하였다.

한편 가계대출 연체율을 담보별로 보면 저축은행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상호금융도 모든 담보에서 상승하고 있다(참고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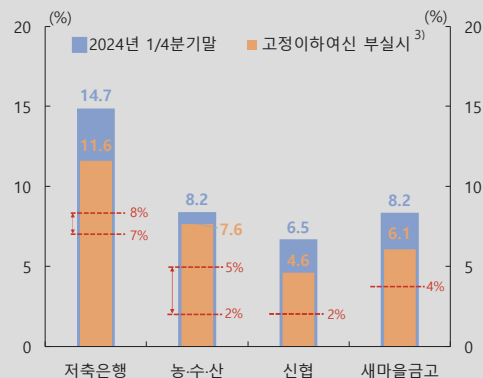
참고 4-3. 가계대출 담보별 연체율



주: 1) 새마을금고 제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 경험 등으로 각 업권들이 자본 확충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참고 4-4).

참고 4-4. 업권별 자본비율 변화¹⁾²⁾



주: 1) 2024년 1/4분기말 기준
2) 붉은선은 감독기준(저축은행 7-8%, 농협 5%, 수협·산림조합·신협 2%, 새마을금고 4%)
3) 고정이하여신 100%가 추정손실로 분류된다고 가정
자료: 한국은행 시산,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자산건전성 저하에 대한 대응력 평가

자산건전성이 빠르게 저하되면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응력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업권의 고정이하여신²⁾이 모두 추정손실³⁾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할 경우 해당 업권의 손실흡수력(자본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부실이 급격히 심화된다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각 업권의 평균 자본비율은 저축은행 11.6%, 농협·수협·산림조합 7.6%, 새마을금고 6.1%, 신협 4.6% 등으로 모두 감독기준⁴⁾을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매각 활성화 필요성

앞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자산건전성이 추가적으로 급격히 저하되더라도 각 업권 전반의 손실흡수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 더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부실자산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경우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고 손실흡수력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기관은 통상 부실자산을 상각 혹은 매각을 통해 처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실자산 처리는 금융기관의 연체채권 등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일부 이익환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⁵⁾

2)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고정이하여신이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1/4분기말 기준 각각 9.7%(고정 6.5%, 회수의문 2.3%, 추정손실 0.9%), 4.9%(고정 4.7%, 회수의문 0.1%, 추정손실 0.1%)이다.

3) 고정이하여신이 모두 100% 추정손실로 분류될 경우의 대손충당금 필요 적립액 중 기적립액을 초과하는 부분만큼 추가손실 및 충당금 추가적립이 발생하여 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에 반영되고 가정하였다. 단, 보수적으로 자산 매·상각에 따른 회수는 없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업권, 대출종류, 건전성 수준 등에 따라 고정비는 20-30%, 회수의문은 50-75%, 추정손실은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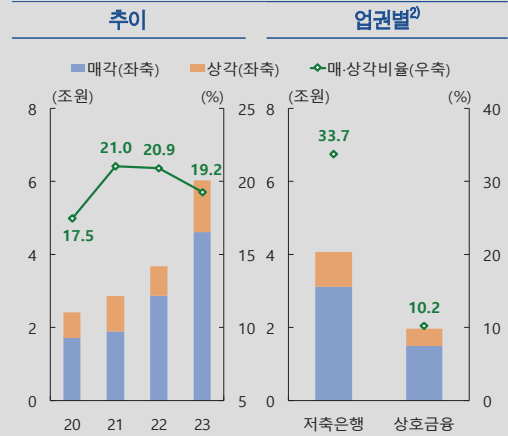
4) 저축은행은 자산 1조원 이상 8%, 여타 7%이며, 상호금융의 경우 농협 5%, 신협·수협·산림조합 2%, 새마을금고 4%이다.

5) 2023년중 매·상각을 통해 저축은행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3.1%포인트 하락(매·상각 전 추정치 10.3% → 2023년말 현재 7.2%)하였고, 상호금융은 0.4%포인트 하락(3.8% → 3.4%)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중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부실자산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부실자산의 19.2%가 매·상각 처리되었다. 매·상각 금액이 전년보다 상당폭 증가하였으나 부실채권의 규모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매·상각 비율⁶⁾은 전년(20.9%)보다 하락하였다. 매·상각 비율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의 매·상각 비율은 33.7%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상호금융⁷⁾은 10.2%로 다소 낮은 모습을 보였다(참고 4-5).

한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매·상각 실적은 은행⁸⁾에 크게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이다. 이는 부실채권의 특성, 관련 제도 등으로 인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부실채권 매각⁹⁾이 활성화되지 못한 데 크게 기인한다. 국내 부실채권시장 투자자들은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우량담보부 채권을 선호하기 때문에 비우량담보부 및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들은 부실채권의 매각가율이 낮거나 매각처가 충분치 못하여 부실자산 매각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채권 종류에 따라 매각 상대방이 제한¹⁰⁾되거나 매각처리기구¹¹⁾ 등이 미비하여 부실채권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다.¹²⁾

참고 4-5. 부실자산 매·상각 규모 및 비율¹⁾



주: 1) 매·상각액(전기말 부실채권 잔액 + 부실채권 순발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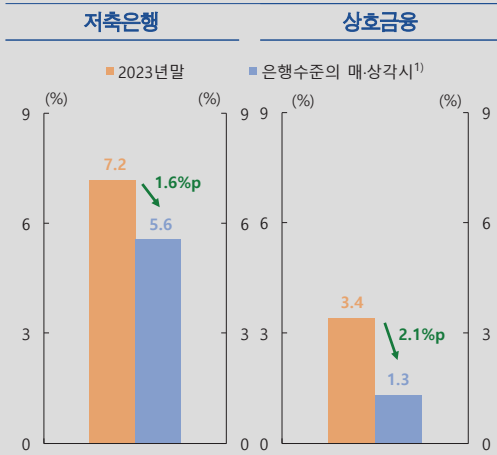
2) 2023년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금융기관 사베이

부실자산 매각이 활성화되어 매·상각 비율이 높아진다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들의 자산건전성과 손실흡수력이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2023년중 매·상각 비율이 은행 수준(42.3%)까지 높아지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실제보다 1.6%포인트 및 2.1%포인트 낮은 수준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러한 부실자산 처리가 상각이 아닌 매각을 통해 일부 이익 환수가 이루어졌을 경우 자본비용이 상승하는 등 손실흡수력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¹³⁾(참고 4-6).

- 6) 부실채권에 대한 매·상각 처리비율로 '해당기간의 매·상각액/전기말 부실채권 잔액+해당기간의 부실채권 순발생액'으로 산출하였다.
- 7) 매·상각 자료 입수가 가능한 농협·수협·산림조합과 신협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매각 실적의 경우에는 집계 가능한 농협만을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 8) 2023년중 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각 비율(42.3%)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2배를 상회한다.
- 9) 매각 비율(매각액/전기말 부실채권 잔액+부실채권 순발생액)을 비교하면 은행 22.7%,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4.7% 수준이다. 한편 금융기관의 상각 처리는 감독규정에서 업권별로 허용하는 자산에 한하여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처리(단, 소액대출 등 일부 예외의 자산은 자체 상각 가능)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업권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다.
- 10)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은 과잉추심 방지, 채무조정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캠프의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를 통해서만 매각할 수 있었으나,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이 개정·시행(2023년 6월 16일)되면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되었다.
- 11) 조합들의 부실채권을 일괄처리하는 자회사를 갖춘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와 달리 신협 등 여타 상호금융은 개별 조합들이 자체적으로 부실채권 매각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측면이 있었다. 신협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과 같이 부실채권 일괄처리를 위한 자회사 설립을 추진중이다.
- 12) 금융당국은 2023년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의 부실자산 매입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PF정상화펀드를 조성(캠프 및 자산운용사에서 투자)하였다.

참고 4-6. 매·상각 비율 상승시 고정이하여신비율 변화



주: 1) 2023년중 매·상각 비율이 42.3% 수준이었을 경우를 가정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금융기관 서베이

시사점

비은행예금취급기관들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큰 폭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으나, 현재 수준의 고정이하여신이 모두 추정손실화되더라도 평균 자본비율이 감독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들 업권의 전반적인 손실흡수력은 이러한 충격에 대응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부실자산의 빠른 증가가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유동성 리스크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통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지표 개선 및 손실흡수력 확충에 더욱 힘 쓸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PF 연착륙 방안¹⁴⁾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부실자산이 집중되어 있는 PF사업장에 대해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재구조화와 신속한 정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비은행권의 부실자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매각처 확대, 매각처리기구 신설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및 시장참여자들 간 긴밀한 논의와 협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3) 매각을 통한 자본비율 상승 효과는 대상자산의 건전성(총당금 적립수준), 회수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실자산을 매각하여 자산가액의 50%가 회수되면서 이익 환수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자본비율(2023년말 기준)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각각 0.48%포인트, 0.0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회수율 상승 등으로 이익 환수 규모가 커질수록 자본비율 상승 효과는 확대되는 반면 회수율 하락 등으로 매각이 추가 손실을 초래할 경우에는 오히려 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14)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금융원,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 (2024년 5월 14일)을 참고하기 바란다.